

희망의 새시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4. 6. 10(화)	
	작 성 과장 이정원, 사무관 이덕희 (Tel. 044-200-2397)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200-2726)
6.10(화) 국무회의 종료 후(12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건의 수용 940건, 부처 소명의무 부과 718건 (5월말 현재)
 -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 국무회의 보고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규제개혁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6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36개 부·처·청 규제개혁차관회의
-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은 수용하였으며, 718건은 접수일 부터 3개월 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 * 14일 처리기간 내 수용률 : '13년 8% → '14.5월말 20.1%
- 또한, 중장기 검토 과제 중 소명조치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하고,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품질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동시에 신설·강화 규제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일몰제를 적용했고, 7월1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 * 당초 7개(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에 1개(산림청) 기관이 더 참여해 총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 예정
-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말 현재 926건이 신고되어 등록·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규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동연 실장은 “규제신문고가 규제개혁의 틀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 등에 대한 처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갑과 을을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김 실장은 “규제감축도 중요하지만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규제 개선”이라며, “부처 규제개혁 평가를 감축 건수보다 핵심규제 개선에 비중을 더 두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다.
 - <붙임> :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4. 6. 10

국무조정실

1.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장관회의(3.20) 이후 5월말 신문고 처리상황

접수	분류	답변 (14일)	답변기일 이후 조치
7,458건	규제건의 (5,262건)	수용 (940건)	이행계획 제출 → 현장점검
		중장기검토 (1,291건)	소명 조치 (401건) → 규제위 개선권고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통보 (890건)
		불수용 (2,438건)	소명 조치(317건) → 규제위 개선권고
	검토중 (593건)	정책참고 (2,121건)	
일반민원 (2,196건)	권익위(국민신문고) 처리		

※ 5월말 현재 수용률 : 20.1%(940/4,669건) > '13년 수용률 : 8%(24/300건)

- (수용) 총 940건의 수용과제 중 국민생활규제(370건), 자영업자 규제(262건), 기업규제(272건) 등
 - *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 (소명) 소관부처에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소명토록 조치
 - *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
- (중장기검토) 정책적 검토 필요 사안, 별도 처리절차 마련
 - * 금융규제(LTV·DTI 등) 완화,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
- (불수용) 안전규제 완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건의 등
 - *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등

□ 소명과제 처리 기한 (최초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소명기한	6월	7월	8월
과제수(718건*)	355건	319건	44건

* 중장기 검토과제 401건, 불수용 과제 317건

□ 상당수 부처가 부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처는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건의인 불만 야기

* △제도취지 단순설명 △중·장기 연구·검토 △타부처 소관 등

< 주요 수범사례 >

- (산업부) 규제청문회(장·차관)에 상정, 불수용 답변 예비 소명
- (복지부) 신문고 건의자 대상 정기적 간담회 개최
- (농림부) 장·차관 일일보고,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답변 검토
- (법무부) 주요 건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제작, 답변

□ 처리방식 개선 필요 : 중장기 검토 과제 및 다부처·지자체 과제

- 중장기 검토과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수용여부 통보 (불가피한 경우 1년 내)
- 다부처 과제는 규제조정회의 및 경제·사회장관회의에서 이견 신속 조정, 지자체 과제는 안행부 주관으로 처리

2. 기존규제 감축·개선

- ◇ 등록규제 감축(量)과 핵심규제 개선(質)을 병행 추진하되, ⇒ 핵심규제 개선에 보다 비중을 두어 평가
- ◇ 국민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당초부터 감축대상에서 제외 ⇒ 규제품질 개선에 주력

등록규제 감축

- 전체 등록규제(15,227건) 중 국민 생명·안전 관련 필수규제 등을 제외한 경제활동 규제(10,054건)를 감축대상 母數로 확정(4.30)
 - '14년 권장 감축목표(10%, 1,005건)를 고려,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균 10.9%(1,100건)의 감축목표를 설정(4.30)한 후
 - 평균 10.2%(1,028건)의 감축대상 규제 제출(5.30)
- 제출된 감축대상 규제(1,028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실제 등록규제 감축에 해당되는 것은 8.8%(886건) 수준
 - 단순 조문정비*, 부분적 규제완화** 등 규제감축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는 감축 불인정(142건)
 - * A조문을 폐지하면서 동일한 규제내용을 위치만 바꿔 B조문에 재규정 등 87건
 - ** 휴·폐업 신고규제(신고, 게시, 휴업기간 등) 요건 중 휴업기간만 삭제 등 55건
 - 감축인정 과제 중 일부는 死文化된 규제폐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폐지 등 효과가 미미, 유의미한 과제 추가 발굴 필요

핵심규제 개선

-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규제 과제로 선정·추진

투자·일자리창출	국민부담경감	서민·취약계층 지원	기타	계
181(45.8%)	120(31.6%)	38(10%)	52(13.6%)	395건

* 다수부처 연계과제 110개(28%)

- 체감도 높은 과제*도 상당수 있으나 일부과제(30% 수준)는 서류제출 간소화, 장부비치 의무 폐지 등 비핵심규제

* △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완화(1년→6월) 등 과도한 주택규제 정상화(국토부)
 △ 129개 임의인증 대상 유사·중복 인증 통폐합(국토부·산업부 등)
 △ 외국인환자 유치비율확대(5%→12%) 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복지부)
 △ 경자구역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 허용(교육부)

- 비핵심규제는 핵심규제 평가에서 제외 + 추가 과제발굴 필요

-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와 별도로 파급효과 큰 과제에 대해 Top-down 방식으로 발굴(규제조정회의시 논의)

- 기관별 규제평가는 실제 규제개선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 핵심규제 개선은 ①투자·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와 ②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 난이도를 고려 평가

* 핵심과제 선정·등급부여·평가방안 등 6월말 확정

3. 규제시스템 개혁

네거티브·일몰

- '14년 4월 이후 신설·강화된 규제 119건 중 생명·안전 및 규범적 규제를 제외한 61건(51.3%) 전체에 대해 일몰* 설정

*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인가 사항의 변경 절차 및 기준(3년, 재검토형)

- 기존규제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 28건 추가 적용, 일몰설정** 현재 12% → 30.5%까지 확대('14년)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
 △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가능 시설 명시 → 금지시설외 허용

**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3년)
 △ 산지전용허가 및 타당성 검토(3년)

규제비용총량제

- 7.1 시범사업 실시에 맞추어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마련, 시범부처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중

- 시범사업 참여부처는 총 8개로 당초 7개에서 1개(산림청) 추가

* 자발 참여부처(8개) :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 산림청

- 부처별 대표사례 비용분석·검증 연습 및 자체 매뉴얼 개발

- 부처별 비용분석 인프라(조직·인력 등) 구축 추진

- 규제비용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DI·행정研 산하 독립기관 형태로 비용분석센터 설치(6.18 출범)

- 출범에 맞추어 규제비용총량제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예정

미등록규제 정비

□ 미등록규제 신고·조사 현황 : 총 926건

구분	신고·조사 수		향후 계획
부처신고	618건	법·령·규칙 (359) 고시 등 (259)	⇒ 정비·등록 ('14년내)
실태조사 (국조실·법제처)		152건	母法 미근거 (44) 상위법 위반 (45) 위임 일탈등 (63)
국민·기업신고	156건		국민신고 (29) 기업신고 (127)

- 6월까지 부처신고 받은 후, 7월부터 국조실·법제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 국민·기업신고는 연중 常時 접수(규제정보포털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규제개선청구제(규제신문고)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 내용으로 정부입법 추진
- 입법예고·공청회 등 거쳐 8월중 국회제출 (정기국회 통과 목표)

규제개혁 교육·홍보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대상 규제개혁 합동교육 실시
 - 서울·과천권 380여명(6.10), 세종·대전권 490여명(6.11) 공직자 대상
 - * 강사 : 복지·문화·여성부 장관, 국조실장, 국정기획수석 등
- 규제신문고 개선사례 등 홍보
 -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차질없이 준비